

#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광주·전남과 거리 더 멀어지나

### 한병도·정운천 발의에 미묘한 파장...호남 미래 걸림돌 우려 지역 정치적 리더십·소통 부재 호남 균열 가속화 목소리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이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광주·전남·전북의 상생 구도에 악영향을 주면서, 호남의 역량 강화와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계기로 광주·전남과 전북의 거리감이 더욱 커지면서 호남의 결속력이 더욱 약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호남의 균열은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및

소통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과 전북 정치권의 보다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는 인구 쏠림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전북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새만금과 탄소 산업, 농·생명 등 특화자원이 있는데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

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 전북 관할구역과 같으며 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특히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지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지원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를 두고, 광주·전남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의 이면에는 각종 현안에서 광주·전남에 밀리고 있다는 전북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전북이 '호남의 틀

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찾겠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또 전북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번 법안이 호남의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광주·전남과 전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정치·경제적 결속력이 현저하게 낮아져 왔다. 실제로 최근의 초광역 경제권, RE300(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 구상 등 각종 현안에서 광주·전남과 전북은 상당한 거리감을 보여왔다.

이 같은 호남의 균열은 지역 정치권의 리더십 및 소통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면서 상생을 토대로 호남의 더 큰 미래를 그려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호남 정치권의 역량 약화와 균열을 가속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과 전

북 정치권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 상생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그려가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같은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제정법안이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만 찬성한다면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실화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여권의 '호남 갈라치기' 구도에 휩쓸려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민주당과 광주·전남 정치권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회의  
더불어민주당 남순호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단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계부채 극복 콘트롤타워 한시 운용해야”

### 소병철 국회의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종합콘트롤타워를 한시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 의원은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자영업자·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위기감에 비해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시급하게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이자 장사한다는 발

언에 은행들이 곧바로 대출이자를 조정하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로 연일 언론의 못맛을 맞은 금융위원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토의 없이 결정되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금융 정책을 관련자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 내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이호준 경기도 골목살점가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의 대책은)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된다. 철저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 의원은 채권추심 위탁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와 1000만원미만 소액채권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야, 김순호 경찰국장 과거 행적 놓고 공방

### “대공요원 활동 대가 특채” vs “문 정부서도 문제 삼지 않아”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이 대공요원 자격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위를 따지며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조합 활동 대가로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당시에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방어막을 펼쳤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후 가진 질의과정에서 민주당 이성만의

원은 “김 국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항4호에 따른 것”이라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용되기 전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느냐”고 질의한 뒤 김 국장이 ‘인생의 스승’이라 표현한 홍승상 전 경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채를 받아줬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홍 전 경감은 대공수사를 했고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었다. 어떤 도움을 줬

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거냐”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국장은)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셨다. 까다로운 인사승진(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 청산에 관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있었냐”라고 질의했고, 김 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밖에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경찰국 설치 과정을 문제 삼는 한편, 지난 집중호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지휘’ 관련 재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동물놀이터 설치 완화’ 도시공원 조례개정안 발의

### 최지현 광주시의원

반려인(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위한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지현 의원은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3만㎡ 이상의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의 규모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규정하는 데 반해 개정조례안은 규모를 ‘3만㎡’로 대폭 완화했다.

최 의원 등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

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놀이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반려인이나 반려인이 서로 만족하면서 공원을 이용하려면 동물놀이터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공원 이용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22~31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